

진단서 위조·과다 청구...보험사기 꾸준히 증가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보험사기 악순환 고리 끊자

<상> 끊이지 않는 범죄

#.지난해 5월 광주지역 치과병원 8곳의 의료진 10명과 환자 144명이 10여년 동안 치과수술 횟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특별법 위반) 5로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의료진들은 지난 2011년부터 치조골 이식 수술을 여러번 한 것처럼 의료 기록을 꾸미고, 환자들은 생명보험 특약 규정에 따라 수술 횟수당 보험금을 추가로 타냈다. 환자 144명은 이같은 방법으로 보험사 4곳으로부터 보험금 총 7억 4000만원을 부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광주지방검찰청 형제지간인 A씨와 B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폐차 직전 외제차량을 500여만원에 값싸게 구입한 뒤 고가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로변경·신호위반 차량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미수선 수리비용 명목으로 보험금을 2500여만원씩 수령했다. 보험금을 받은 뒤에는 단

수술 횟수 부풀려 보험금 챙기고 중고 외제차 산 뒤 고의 교통사고 수법도 갈수록 지능적이고 교묘 선량한 가입자들에 피해 고스란히 광주 5년간 보험사기 940건이나

독사고로 폐차 처리하는 방식으로 47회에 걸쳐 6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에서 보험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사기 수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지능적이며 교묘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광주에서 30건의 보험사기가 적발됐으며 71명이 검거됐다. 이 중 2명이 구속되고 69명이 불구속 수사를 받았으며, 피해 금액은 21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19년 344건, 2020년 111건, 2021년 285건, 2022년 170건에 이어 올해 30건 등 총 940건에 달한다. 검거 인원 또한 5년간 2601명에 달하며 피해금액은 329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보험사기범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거처를 옮겨 가며 범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국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 818억원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진단서를 위·변조하거나 입원수술비를 과다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입원한 적 없는 병원의 입퇴원확인서를 변조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방식으로, 이같은 사례는 2020년 1만 3498건에서 2022년 1만 7316건으로 2년 사이 28% 급증했다.

또 일방상해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로 위장한 경우도 2020년 6139건에서 2022년 8024건으로 30% 증가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을 상해사고로 위장한 경우도 2020년 7467건에서 2022년 1만 197건으로 36% 급증했다.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에는 폐차 직전 외제차를 싼 값에 사들인 뒤, 값비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고의 사고를 내는 방식의 사기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 주동자들이 지인을 모집해 선수금을 주고, 차량 고의사고를 내도록 지시해 여러 명의로 보험사기를 반복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으며, 페이스북·인스타그램·SNS 등

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고 실행하는 사례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에 따르면 보험사기 피해가 늘수록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보험금 누수가 많아질수록 민영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각종 공·민영 보험료가 일제히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향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두드러지는데, 보험연구원이 지난 2020년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보험금 청구자의 상위 10%가 전체 지급 보험금의 48.5%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오는 2031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80%를 넘길 전망이다, 10년간 누적 손해액 또한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예측했다.

김성훈 손보험 서부지역본부장은 "세간의 인식과 달리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보험사본 아니라 전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감찰, 경찰 등 수사기관뿐 아니라 국민이 보험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기 의심사례를 적극 신고하는 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피해자 SNS 뒤져 사진 출력 편지 보낸 30대 스톡킹 유죄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관심을 표시하면서 여성의 SNS 계정에서 출력한 사진과 공포심을 유발시킬 만한 편지를 건네 준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스톡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의 SNS 계정을 뒤져 사진을 출력한 뒤 편지와 함께 건네는 등 4~5차례에 걸쳐 스톡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0월 말 피해자가 일하는 카페에 방문한 뒤 같은 해 11월과 지난해 2월 다시 찾아가 피해 여성에게 과자와 초콜릿 등을 건넸다.

지난해 4월에는 카페 근처에서 "오랜만이네 요"라고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 여성이 "예 안녕하세요"라는 의례적인 대답만 하자 이후에도 수차례 접근을 시도했다.

A씨는 "피해자의 태도에 비취 의사에 반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호감 표현이 서툴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밝힐 수 없지만 편지 내용 상 일반적인 호감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헌혈 동참 사망' 박금희·'꼬마상주' 조천호 등 유가족 315명, 5·18 정신적 손배 소송 승소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이 열린 지난 18일, 계엄군의 총탄에 희생된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식 후 직접 묘역을 찾아 참배한 전영진 열사와 정운식 열사(5월 19일자 광주일보 4면)의 유가족들도 이번 소송에 참가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나경)는 지난 18일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등 31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 금액 중 50%~89%를 인정해 정부가 유족들에게 각각 800만원~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는 5·18 당시 헌혈 행렬에 동참했다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진 박금희(여·당시 17)씨 가족과 '꼬마상주'의 영정 주인공인 조천호(당시 34세)씨의 유족도 참여했다.

조씨는 1980년 5월 20일 광주교대 인근에서 계엄군에 구타당하는 학생들을 말리다 시위에 참가해 이튿날 옛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3대 독자인 조씨는 빈소를 지켜줄 친척이 한 명도 없어 다섯 살 난 아들 천호군이 상복을 입고 '꼬마상주' 역할을 했다. 당시 외신기자에게 찍힌 천호씨의 사진은 5·18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1980년 5월 19일 무등경기장 인근에서 계엄군이 시민들을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고 항

의하다가 폭행당해 1983년 생을 마감한 차중성씨 유가족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재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정부는 공권력을 남용해 직무상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대 항공우주공학관 화재 30분만에 진화, 인명피해 없어

지난 28일 밤 9시께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 항공우주공학관 1층 실험실(로켓추진실)에서 불이 났다. 광주동부소방에 따르면 불은 30여분만에 꺼졌으며 건물 내부에 있던 3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건물 내부와 실험용품 등이 불타면서 1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로켓추진실에는 로켓의 추진제(산화제)로 쓰이는 발연성 물질 '질산'을 포함해 여러 화학물질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이들 화학물질로부터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정동년 선생 1주기 헌화하는 전우원씨

5·18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에 앞장 섰던 '5·18 사형수' 고(故) 정동년 선생의 1주기 추모식이 29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2묘역에서 열렸다. 추모식에 참석한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가 고인의 묘소에 헌화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교통신호 무시 사고 낸 킷보더, 건강보험료 환수는 적법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전동킷보드를 타다 사고를 낸 70대가 지급받은 건강보험료를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71)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0일 광주시 동구 서석

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임에도 전동킷보드를 탄 채 건너다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종아리와 허벅지 뼈가 부러져 광주의 한 대학병원과 정형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공단은 두 병원에서 청구된 A씨 치료비 중 부담금 2900여만원을 지급했다가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에 지난해 4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2900여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A씨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

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이 '내사종결' 됐다는 점을 들어 공단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당시 시야확보가 어렵지 않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속도를 줄이려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순간적 착각으로 교통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야기했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며 "A씨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지급된 보험 금액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